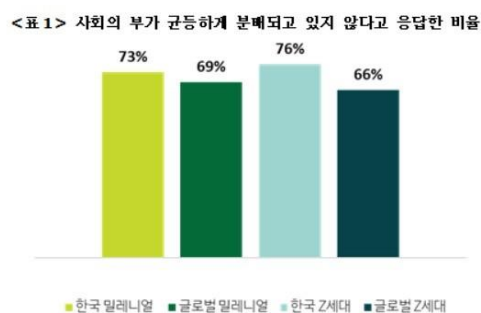


시장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 어느 것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더 알맞은가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간 논의를 해야 함.
- ④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문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 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 ⑤ <서론-본론-결론>을 잘 구분하여 작성한 에세이지만, 본문의 세부적인 장과 절을 더 꼼꼼히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서론

최근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발표한 밀레니얼 세대 (1983~1994년 출생자)와 Z세대 (1995~200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에 포함된 그래프이다.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제성장과 고용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능력주의와 불평등] 저자들은 공정성 논란의 배경에는 능력주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이다. 능력주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두 영역은 교육과 직업이다. 이 두 영역은 개인의 능력의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 부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 경제적뿐 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으로까지 큰 영향을 준다. 우선 부의 불평등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본론

1.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

(1). 사회, 경제적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지니계수¹ 평균은 2014년에 0.318에 도달하였으며, 옥스팜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인구의 약 1%에 불과한 소수의 부자들이 나머지 99% 사람들의 재산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49.2%로 최고치에 달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 소득 집중도가 높았다. 또한 소득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하향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커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줄어들고 빈곤의 고착화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2). 개인적 문제

최근 심리학계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인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격차를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등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를 지각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위험을 감수 의사결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2. 시장자유주의 신념과 복지국가 자유주의 신념 -> 핵심 논증이 제시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예로부터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정의 사회에 대한 두 가지 상호경쟁적인 사상이 정치담론의 중심을 차지했다. 하나는 자유시장 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 자유주의이다. 이 두 철학은 능력주의적 신념에 강력한 반론을 제시한다.

(1) 자유시장 자유주의

자유시장 자유주의는 경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시장 자유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

¹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하는지를 알려준다.

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며 누진세는 부당하다 말했다. 그가 출간한 [자유헌정론]에서 하이에크는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순수하고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직업의 기회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등을 지키려 하면 안 된다. 하이에크 (= 자유시장 자유주의)는 시장적 결과가 능력에 대한 보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능력은 각자가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 있고 가치는 단지 소비자가 이런 저런 상품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척도일 뿐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의 능력과 보상은 비례하며 경제적 보상에 지나진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잘못이다. 또 보상의 차이가 각자의 능력 차이와 별 상관 없다. 경제적 보상과 개인의 능력, 도덕적 자격은 전혀 무관하다. 자유 사회에서 소득과 부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반영한다. 봉급과 임금은 좋은 인격이나 칭찬할 만한 업적의 보상이 아니며, 시장 참여자들이 내놓은 재화나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보수일 뿐이라고 답변한다.

(2).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국민의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존 롤스의 저작에서 온다.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에서 롤스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상해 주는 체제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로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평등한 사회에서 경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승자는 가장 큰 재능의 소유자일 것이나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다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에서 더 나은 출발점을 차지할 능력을 내세울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닌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는 것이 아닌 승자가 남들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누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승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받는 보상이 시장에서 부풀려지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와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재능이 시장 사회에서 거둔 성과를 능력이나 자격을 내세워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복지국가 자유주의와 능력주의가 구별된다. 재능을 높이 평가하거나 애초에 그런 재능을 가지게 된 것에 내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나의 소득 일부를 가져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비, 길을 닦는 데 쓰이더라도 불평할 권리 없다. 성공한 개인이 어느 정도는 공동체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반드시 보상의 배분이 가장 불운한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두 이념 또는 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들의 사상에 부자가 내 스스로 번 돈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번 것이며,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떼어가는 일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다. 거기에 롤스는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미덕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성공은 다만 개인의 능력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의 수요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정당한 세법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법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소득을 취할 수 있으나 세법이 애초에 그들의 능력과 성취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보상에 개인의 자격을 근거하면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생산적인 기여는 윤리적 중요성과 상관이 아예 없다. 높이 평가되는 재능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소득은 높아질 것이나 그 재능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며,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우연히 갖게 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뜻이고,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일이 반드시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자본을 소유한 자의 독점적인 행사권과 그가 제시하는 시장의 흐름과 가치는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린 문제다.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우연히 갖게 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뜻이고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일이 반드시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시장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이 정반대의 입장은 아니다. 이 두 사상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시장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 모두 정의의 기반으로 능력이나 자격을 거부한다. 시장 자유주의는 능력에 따라 보상한다는 건 실제로는 따질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고 복지국가 자유주의 역시 능력과 자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널리 존재하며 자격과 정의의 기반으로 삼는 일은 자유와 불일치 한다면 지적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자유를 시장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에게 자유란 좋은 삶에 대한 각자의 개념을 추구하되 다른 이들의 추구할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특수한 이해관계와 유풃리를 초월해 모든 동료 시민이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여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현재의 상황의 해결에 더 알맞은 사상을 고르라면 복지국가 자유주의라 말할 수 있다. 시장 자유주의의 시장력은 자본에 대한 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경제성장률의 격차를 확대시켜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혁신가 생산성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둔화 시켜서 그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또 완전경쟁적인 시장과 비교할 때 균형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부가 이전되는데 그 대부분이 부유한 주주나 경영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시장력이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경쟁법²이나 경제정책이 불

²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 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을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평등 자체를 표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부당한 시장력을 감소시킬 경우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감소될 것이다. 학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적인 경쟁법 집행을 주장한다. 공격적인 경쟁법 집행은 시장력이 심화시키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쟁 당국이나 경쟁법 집행이나 규제에 있어서 불평등 감소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재분배 효과가 있다. 경쟁법에 대한 7가지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첫째, 경쟁법 사건 판단 기준으로 소비자 후생 기준을 포기하고 총후생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다. 둘째, 개별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정조치를 고안하는 것이다. 다만, 경쟁법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 법원이나 경쟁 당국이 경쟁제한 행위를 억지하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시정조치해야 한다. 셋째, 독점적 사업자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같은 착취 행위를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해야 한다. 셔먼법은 독점적 사업자가 시장력을 행사하여 경쟁가격 수준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데, 이것을 새로운 입법 마련이나 원래 존재하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열악한 위치에 처한 소비자에 대한 독점 가격 책정이나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무과실 득과점 금지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의 불평등 문제는 현재 혹은 미래 많은 이들에게 주목될 문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시대에 따라 사회, 문화에 따라 많은 해결 방법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쪽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연구,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더 알맞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이호영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영주 나진경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개관]

정원석 [자본주의에서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위한 법령

이병희, 강병구, 성재민, 홍민기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한국노동원 연구보고서

기타

News1 한국의 MZ세대 10명 중 7명 '부의 불평등 심각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28921?sid=101>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498